



비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농업, 경제 등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21일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농업·경제 협력 논의

주한카자흐 대사 전북방문... 송 지사와 면담  
마켓 대사 “전북도 농업 정책에 관심있어”

비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농업, 경제 등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21일 전북을 방문했다. 송하진 도사는 전북도청을 찾은 바

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를 만나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양 측은 한카

자흐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자체간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카자흐스탄 대사는 전북도 농업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도 전주상공회의소를 방문, 전북도와 카자흐스탄 기업 및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시찰하는 것으로 전북 방문일정을 마쳤다. /유호상 기자

## 갑질 피해 회복 관련 조례안 “환영”

송성환 도의원 대표 발의... 갑질피해대책위 ‘찬동’

갑질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백남운, 이하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피해기업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힘찬 박수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송성환 전북도의회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자금이 나 법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갑질 행위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피해 사실을 공정위 등에 제보해 공익 제보자가 되고, 공정위가 인정한 과징금을 몰라도,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확보 등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하도록, 갑질 피해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동안 갑질 피해 사실에 공정위 등에 제보해 공익 제보자가 되고, 공정위가 인정한 과징금을 몰라도,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유호상 기자

또 피해자는 2중 3중의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건전한 지역기업이 도산해 지역경제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이어져 왔다. 사실상 국가는 갑질 피해자들의 공익제보로 엄청난 과징금을 받아쓰고 도 피해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국가적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매우 안타까웠지만, 전북도의회가 이를 해결하는 일이라서 더욱 칭찬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책위는 “신속히 조례를 제정해 갑질 피해 문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해결한 전북도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의 갑질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에 적극 찬동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환복위 “도내 자살방지 대책 마련 깊은 고민 필요”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1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복지여성보건의료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시설이전 갈등해결, 자살방지 대책 공무원 인력 충원 등 복지여성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1)은 “도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와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서 정한 보수지급표나 승진제도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오 의원(익산)은 “익산 증중 장애인시설 후주원 이전과 관련, 도치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다”며 “익산 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증중장애인의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전주5)은 “복지여성보건의료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관련, 복지여성보건의료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하므로, 과별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내 노인인구 및 관련시설 증가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비례)은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북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실제 전년 대비 사망자수와 자살 시도율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도내 자살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지역별 백신 우선순위가 달라 발생될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 문건위 “도내 산재 미지정 문화재 총괄 관리해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1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등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했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도내 미지정 문화재를 총괄 관리해 발굴할 것을 독려하고, 도내 국가 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과 연계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 체험 향유 기회를 늘려달라고 주문했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특성에 따라 시·군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국립무형유산원의 공예품을 도청사 로비나 전시실에 전시하고, 도민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해 도내 국가 기관 유치 효과를 도가 나서서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한원수 의원(임실)은 “정부가 무형문화유산을 5년간 100개를 발굴·육성한다는데, 도내에 산재해 있는 미지정 문화재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각 시·군에 무형문화유산 발굴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목조건물인 전통사찰에 빗물 이용 소화시스템을 확산 보급해 다시는 화재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시의회 미래세대연구회, 태양광 시설 확대 간담회

전주시의회 연구단체 미래세대연구회가 21일 태양광 시설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래세대연구회 전주시 에너지 관련 부서, 한국에너지공단전북본부,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이 참여해 전주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당위성 및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국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그린 뉴딜 추진 전략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영규 미래세대연구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태양광 시설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전주가 탄소중립시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 “지역 기여 없는 전은, 상생 위한 제도개선을”

박용근 도의원 “협력사업비 규모 35여억원 확대 연수원 건립 공동도급 발주 등 대책 필요” 주장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21일 제383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B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등 지역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는 전북은행에 대한 협력사업비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의 제1급고와 제2급고는 각각 농협과 전북은행으로, 제1급고의 경우 일반회계를, 제2급고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담당하게 된다. 각종 금융 사업을 운영하는 은행의



특성상 평균잔액이 높을수록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 현재 농협의 평균잔액은 약 4,207억원, 전북은행은 6,638억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일반회계에서 각종 신속집행이 이뤄진 까닭이다. 이처럼 평균잔액 규모가 농협에 비해 크지만 협력사업비는 농협의 1/3 규모인 21억원에 불과해 제2급고인 전

북은행이 제1급고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박용근 의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박용근 의원은 “지역에서 각종 이익을 보고 있는 전북은행이 약 600억 원 규모의 연수원 건립 사업에서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북은행이 지역의 향토은행으로서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며 “협력사업비 규모를 약 35억 원 정도로 확대하는 한편, 연수원 건립 사업을 공동도급으로 발주해 6:4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운영자는 ‘아직도 협의중’

지난 2019년 12월 개관 후 2년동안 운영 약속했음에도 콘진원·KT간 입장차 뚜렷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모아지오 지적도 이어져



안, 전문성을 지닌 KT가 초기 시설운영을 연착륙시킨 후, 그 노하우를 군산시가 이어받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관 이후 시설 외벽공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운영이 지연되면서 KT는 운영을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70여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시설을 조성해놓고도 아직까지 운영관리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북콘진원의 부실한 사업관리 탓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관 후 2년간 운영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도 KT는 주계약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모아지오가 군산홀로그램 콘텐츠체험존에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모아지오는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지난

2018년 도립미술관에 ‘콘텐츠테라피’라는 지원사업 결과물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문제 기업이었다. 문제는 2019년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이 논란이 된 이후, 전북콘진원은 주)모아지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2020년 1,980만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2억 원 규모의 지원과제 선정과 8억 4,2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전북콘진원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아 사실상 특정 업체 비추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동용 의원은 “지난 2018년 이후 도내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 주)모아지오는 두 번째로 혜택을 많이 받은 업체”라면서 “전북콘진원의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비례하는 책임도 묻는 것이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금융, 전북 중심산업 되도록”

도의회 농산경위 “금융중심지 지정 노력 성과 얻지 못해”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1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송성환 의원(전주7)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및 관료개혁을 위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금융중심지 지정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라는 형식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 금융산업이 전북도 중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최현열 의원(부안)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관련에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있다”면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전북도 청년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분야별 정책 추진이 아니라 청년들이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전북도 디자인센터가 예산과 사업수행 측면으로 양분해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온누리 상품권 지원 사업과 관련, “공급처에서 사업참여를 원하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공급처의 피이를 키워 수요자의 입장에서 쓰임이 다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수립 및 홍보”를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 “공공구매제 의무화 비율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율 저조”

도의회 교육위 “지역청·학교에 적극 홍보 올 연말 더 높은 구매율 달성해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1일 도교육청의 4개실·국인정책공보관실, 감사관실, 교육국, 행정국의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실시했다.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창)은 “예산 집행률이 매우 높은 부서는 대부분 학교가 신청한 예산 배분을 완료했기 때문이지만, 정작 예산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한 건은 저조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도교육청의 역할이 각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업 등이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은 “주말과 방학에 이뤄지는 학교내 작은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에 미흡하거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북도의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현황판 설치 등을 규정하는 조례에 따라, 작은 공사도 체계성 있는 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생 안전보장은 물론, 지역주민과 공사 관계자 안전을 위해 도교육청도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등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및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2)은 “공공구매제도 의무화 비율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기준 8% 중 0.8%

만을 충족했다”며 “지역청과 학교에 더욱 적극적인 홍보로 물에 달이는 더 높은 구매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타 시도의 경우 교육 상품 카드 발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도교육청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 경제 위기에 함께하는 도교육청”이라는 이미지 재고와 위기 극복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